“교황식 투표 담합·나눠먹기 폐단 의장 선거 공개 토론회 실시해야”

광주시의회 유재신의원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교황식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정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선호 후보에게 기표하는 현행 방식은 의원들간 담합과 자리 나눠먹기 등의 폐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재신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교황식 선출방식’은 정책과 비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패거리 문화, 개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장 선거를 위해 입후보자 등록, 공개 토론회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행 의장 선거의 경우 19명의 의원 가운데 10명만 확보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의 자리 나눠먹기가 가능하고 의사 일정과 내용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투표 개시 전 10분 이내로 이뤄지는 정견 발표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대안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 등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교황식 투표 방식의 민주적 절차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개선점을 비롯,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성폭력 연루 의혹 시의원 공개 사과 자진 사퇴하라”

광주·전남 여성단체 성명 촉구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의원의 사퇴와 의장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시민에게 떳떳한 광주시의회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으로 형사 고소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의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성폭력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돼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회는 무늬만 남아있는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범죄 행위나 주민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경찰과 시의회에 각각 정보공개 요청과 비위사실통보서 공개 요청을 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해당 의원의 자진사퇴, 재발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의 회의장 입장 저지, 1인 시위, 주민소환제, 시의회 앞 촛불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원은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뢰없는 인터넷은 毒”

李 대통령, 서울 OECD 장관회의 개막 환영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고 이는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라면서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흡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지만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광우병 위험 주장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간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도 물바다 인도 북부지역에서 예년보다 2주나 빨리 몬순이 시작되면서 대비가 덜 된 일부 지역에서 수십명의 사망자와 2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7일 인도 콜카타에서 한 버스 승객이 도로를 덮친 흙탕물을 살펴보며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공기업 민영화 혁신도시 조성 사업 치명적 영향”

나주서 ‘혁신도시 세미나’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신대 조진상 교수(도시관광계획학과)는 18일 나주시청에서 열릴 ‘혁신도시건설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공공기관 이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구소, 대학을 유치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수도권 규제는 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주로의 어떤 유인책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극복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경쟁우위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에서는 굳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혁신도시 추진 방침이 표류하고 산업도시 등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이전 없는 혁신도시는 일반적인 신도시로 전락해 사업 자체도 탄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도 주제발표문 ‘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외국인학교·병원 개설, 특성화고교 등 국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반기문 총장 신뢰도 가장 높아

20개국 국민 조사…푸틴-브라운 총리 順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 등 8명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총장은 한국에서는 세계지도자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 세계가 리더십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는 여론조사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브릭오피니언이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지도자 8명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 사무총장은 20개국에서 평균 신뢰도가 35%로 8명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32%), 브라운 총리(30%), 후 주석(28%), 사르코지 대통령(26%) 등 순이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에 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20개국에서 평균 23%의 신뢰도를 얻는데 그쳤다.

한국에서는 또 일본과 필리핀 등 지역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뢰도가 12%로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